

제220호 (2009. 8. 17)

■ 경제 동향

- 6월 국내 건설수주, 올 들어 처음으로 증가세

■ 정책·경영

- 발주기관의 PQ 변별력 개선 동향 및 시사점
- 미국 주택시장 양극화 심화

■ 정보 마당

- 외부 지원의 한계

■ 연구원 소식

■ 건설 논단 : 실효성 있는 민간투자 대책을...

6월 국내 건설수주, 올 들어 처음으로 증가세

- 전년 동월 대비 17.9% 증가, 공공부문 수주 호조 영향 -

■ 6월 공공 토목수주 역대 최대치 갱신, 공공 건축수주도 증가

- 6월 국내 건설수주는 민간부문이 침체를 지속했으나 공공부문은 건축과 토목 모두 큰 호조를 보여 전체적으로 전년 동월비 17.9% 증가, 올 들어 처음으로 플러스(+) 성장 기록
- 공공부문의 경우 토목수주가 역대 최대치를 기록하고 건축수주도 호조를 보여 전년 동월 대비 310.3% 증가한 7조 4,453억원을 기록함.
 - 공공 토목수주는 전년 동월 대비 557.9% 증가하여 지난 4월과 마찬가지로 증감률이 500% 이상 급등하였으며 1976년 1월 통계작성 이래 월간 수주액으로는 역대 최대 금액인 6조 2,837억원을 기록함.
 - 건축수주도 호조를 보였는데 비주거용 건축수주가 전년 동월 대비 13.3% 감소했으나 주거용 건축수주가 전년 동월 대비 168.9% 증가하여 전체적으로 전년 동월 대비 35.2% 증가함.
- 민간부문의 경우 전년 동월 대비 54.2% 감소한 3조 3,687억원으로, 56.3% 감소한 5월 보다는 감소폭이 다소 완화되었으나 여전히 침체가 심각함.
 - 민간 건축수주는 주거용과 비주거용 건축수주가 각각 전년 동월 대비 44.1%, 43.7% 감소하여 전년 동월 대비 44.0% 감소한 3조 1,432억원을 기록하였는데 51.4% 감소한 지난 5월보다는 침체폭이 다소 완화됨.
 - 토목수주는 지난 3월부터 시작된 감소세가 지속되어 전년 동월 대비 87.0% 감소한 2,249억원을 기록함.

<2009년 6월 건설 수주>

(단위 : 십억원, 전년 동기비 %)

구 분	합계	발주처별						공종별			
		공공	토목	건축	민간	토목	건축	토목	건축	주택	비주택
2009. 6월	11,247.0	7,445.3	6,283.7	1,159.4	3,368.7	224.9	3,143.2	6,940.1	4,304.1	2,688.8	1,615.3
증감률	17.9	310.3	557.9	35.2	-54.2	-87.0	-44.0	146.7	-35.8	-31.8	-41.6
2009. 1~6월	43,051.2	26,374.0	20,781.3	5,578.1	15,256.2	2,164.8	13,065.4	23,899.5	19,110.8	11,734.8	7,376.0
증감률	-8.5	96.0	211.8	-17.5	-52.7	-52.7	-52.7	100.3	-45.5	-48.6	-39.7

자료 : 통계청

■ ‘도로 및 교량’, ‘철도 및 궤도’ 수주 전년 동월 대비 급등, 건축 공종은 모두 감소세

- 토목수주의 경우 세부 공종별로 ‘도로 및 교량’과 ‘철도 및 궤도’ 수주가 전년 동월 대비 600% 이상 크게 증가했으며 경인운하사업의 영향으로 ‘치산치수’ 수주도 급등한 것으로 나타남.
 - ‘도로 및 교량’ 수주는 고현~하동IC 2국도건설공사(제2남해대교)와 제65호선 울산~포항간 고속 국도 등 천억원 이상의 대형 사업의 영향으로 전년 동월 대비 616.5% 증가한 2조 5,550억원을 기록, 올해 들어 가장 큰 수주액을 기록함.
 - ‘철도 및 궤도’ 수주는 전년 동월 대비 603.5% 증가한 1조 3,347억원으로 대구와 인천의 도시철도 수주가 크게 증가함.
 - 경인운하 1공구 공사와 턴키·대안 공사로 발주된 ‘경인 아라뱃길’ 공사의 영향으로 ‘치산치수’ 수주가 전년 동월 대비 7,384.2% 급등한 5,348억원을 기록해 지난 5월과 마찬가지로 연간 수주 규모인 5,000억원 이상의 높은 수주액을 기록함.
 - 6월 말 발주된 ‘4대강 정비사업’ 물량으로 ‘치산치수’ 수주는 향후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
 - ‘치산치수’ 수주의 증가와 함께 ‘항만’ 수주도 증가(155.0%)했는데 부산 지역의 항만 배후단지와 방파제 보강공사로 수주가 증가함.
- 경기침체의 영향으로 인해 세부 공종별 건축수주는 모두 전년 동월 대비 마이너스(-) 성장률을 기록함.

〈주요 세부 공종별 수주액 및 증감률〉

(단위 : 십억원, 전년 동월비 %)

구분	건축					토목					
	주택	사무실 및 점포	공장 및 창고	관공서	기타	도로 및 교량	철도 및 궤도	치산치수	토지조성	항만 및 공항	기계설치
2009.6	2,688.8	731.6	196.5	436.1	251.1	2,550.0	1,334.7	534.8	444.5	359.6	324.0
증감률	-31.8	-51.7	-57.6	-12.1	-13.5	616.5	603.5	7,384.2	22.7	155.0	-62.0
2009.1~6	11,734.8	2,805.6	1,404.3	2,157.4	1,008.7	9,024.4	4,890.3	1,255.5	2,107.7	879.4	2,447.6
증감률	-48.6	-56.0	-49.8	-8.5	43.9	255.8	510.0	665.2	-19.0	41.7	-5.8

자료 : 통계청

박철한(연구원.igata99@cerik.re.kr)

발주기관의 PQ 변별력 개선 동향 및 시사점

■ 신용평가등급 상향 및 동일 공사실적과 현장투입 기술자에 대한 평가 강화

- 최근 국토해양부 산하 5대 정부투자기관은 건설산업선진화위원회에서 제기한 문제점을 토대로 공공공사 입찰에 적용하고 있는 PQ(Pre-Qualification, 사전자격심사) 변별력을 강화하기 위한 제도 개선안을 발표하였음.
- 공사실적 부문에서는 동일 공사에 대한 실적 평가를 강화하고 있는 점이 특징적임.
 - 한국도로공사 : 동일 실적은 발주대상의 1/3 이상 실적에 한해 인정
 - 대한주택공사 : 건축공사 등 업종별 실적평가를 공동주택 등 공종별 실적평가로 변경
 - 한국토지공사 : 동일공사 범위를 「택지개발촉진법」상 택지개발 등 14개 사업으로 한정
- 공사이행능력평가는 현장투입 경력 기술자에 대한 평가를 강화하고, 시공지원 기술자의 배점을 축소하는 것이 특징적임.
 - 신인도는 배점을 확대하는 기관이 많으며, ‘직접 시공’이나 발주기관 표창, 예산절감 사례 등에 대하여 가점을 신설하는 사례가 많음.
- 경영상태 평가는 신용평가 등급을 상향시키거나, 공사 규모별로 차등화하고 있음.
 - 철도시설공단은 PQ 총점의 5%를 사회적 책임(SR : Social Responsibility) 평가로 대체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며, 점차 확산될 것으로 예상됨.
 - SR 심사 항목은 지역공동체 참여, 인권, 노동관행, 환경, 공정운영 관행 등임.

■ 건설업체의 전문화 및 특화 유도, 질적 평가 가미 필요

- 5대 정부투자기관의 PQ 개정안을 보면, 동일 공사실적이나 기술자 보유 등 양적 평가를 강화함으로써 중견기업은 단기적으로 수주에 어려움을 겪을 가능성이 있음.
 - 따라서, 단순한 양적 능력뿐만 아니라 공사실적의 특화도나 과거시공평가 등 질적 평가가 가미될 수 있도록 하고, 체급별 경쟁이 가능하도록 군별 제한경쟁이나 도급 하한액, 시공여유율 등의 제도 개선이 병행될 필요성이 있음.
- 건설업체에서는 PQ 변별력의 강화에 대응하기 위해서 지금까지의 문어발식 공사 수주에서 벗어나 핵심 공종을 중심으로 전문화, 특화를 추구해야 함.
 - 공사이행능력 평가 부문에서는 핵심 공종의 경력기술자 확보에 노력 필요

- 신인도 평가에서는 대기업에서는 사회적 책임(SR) 평가에 대한 대응 체계를 구축하고, 중소기업체는 직접시공능력을 확대해야 함.

<5대 정부투자기관의 PQ기준 개선(안)>

구분	공사 실적	기술적 공사이행능력	신인도, 경영평가
도로공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동일 실적은 발주 대상의 1/3이상 실적에 한해 인정 ·교량, 터널, 고속도로의 동일실적 인정 한한을 1/3~1/6로 차등화해 탄력 적용 ·시공 경험 평가시 고속도로 만점 부여 기준을 공사연장 100%에서 300%로 강화하고, 시공 기한도 5년 내 실적은 100%, 5~10년 내 실적은 50%로 차등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경력기술자 평가등급은 상향 조정 하고 해당공사 동일실적 이상 현장 경력에 한해 인정 ·고속도로 외 국도, 철도, 지하철 경력기술자도 평점의 50%만 인정 하고, 변별력이 적은 일반기술자, 시공지원기술자 배점은 축소 ·신기술개발활용 배점은 2배로 높이고 시공평가방법도 상대평가로 변경 	<ul style="list-style-type: none"> ·경영 평가의 신용 평가 등급을 공기, 공사비별로 차등화 ·신인도평가는 하도급협력관계, 재해율 배점을 1점씩 줄이고, 예산절감(2점), 직접시공실적(1점) 배점을 신설
주택공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건축공사 등 업종별 실적평가를 공동주택 등 공종별 실적평가로 바꾸고 준공 기간 경과율도 연도별로 책정하여 차등화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기술적 공사이행능력 통과점수를 93점에서 95점으로 상향 조정 ·주공 발주 공사의 시공경험(9점), 포상(1점), 우수전문건설사 배출 실적(1점) 신설 ·시공경험을 10점 줄이고 기술능력, 시공평가결과를 5점씩 늘림.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신인도 점수는 -4.5~3점으로 차등화 하되 우수시공업체, 품질하위업체 항목 신설 ·1단계 신평등급은 1,000억원이상 공사에 한해 현행 BB+에서 BBB-로 강화
토지공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동일공사 범위를 택지개발촉진법상 택지개발 등 14개 사업으로 명시해 시공실적 인정 범위를 축소 ·시공실적은 최근 5년내 100%, 5~10년은 80%만 인정 ·토공 발주 공사 시공 실적은 20% 가중치 부여, 민간 발주 공사실적은 80%만 인정 ·하도급준 시공실적은 80%만 반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특수시설은 경력기술자, 일반기술자 배점을 2점 줄이고 시공지원기술자 항목 삭제, 현장 투입 인력(3인) 배점 10점 신설 ·동일유사공사 현장경력별로 2점 (3년 미만)부터 5점(5년 이상)부여 하고, 현장대리인은 단독평가, 현장 기술자는 각각 평가해 산술 평균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신기술 활용실적은 3점에서 5점으로, 매출액 대비 건설기술개발 투자비율은 8점에서 6점으로 낮춤. ·신인도평가는 -5~2점으로 다각화, 우수 시공업체, 예산절감 우수사례에 각 1점 부여 ·신용평가등급 만점기준은 1,000억원이상 공사에 한해 현행 BB-에서 BBB-로 상향
수자원공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시공경험 배점을 5점 줄이고, 실적 인정기간은 5년(도로, 단지, 교량, 터널 등), 10년(관로, 정수장 등), 20년(댐, 여수로, 갑문 등)으로 차등화하고 동일실적 인정 규모도 세분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기술자 평가는 일반기술자와 시공 지원 기술자 배점을 줄이고 경력 기술자 점수를 14점에서 20점으로 상향 ·신기술 개발 활용 점수는 총 4점 에서 10점으로 확대 ·기술개발투자비를 점수는 삭제하고, 시공평가 배점을 15점으로 확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1,000억원 이상 혹은 500억원 이상이면서 공기 3년 이상 공사의 경영상태 평가 기준을 신용등급 A- 이상으로 강화 ·신인도점수는 3점에서 -10~5점으로 조정 ·우수협력업체 가점을 없애고 공사예산 절감, 직접시공(각 1점)과 발주기관표창 (2점) 가점 ·PQ 통과 후 입찰 미참여 -1점, 발주 기관 자체 제재시 -3점
한국철도 시설공단	<ul style="list-style-type: none"> ·동일공사 실적은 5년 이내 1.2, 5~10년 0.8의 가중치를 매겨 환산 ·5년 이내 실적은 토목공사등 업종이 아니라 교량 등 공종별로 분류된 실적 활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경력기술자 배점은 12.5에서 15.5점으로 늘리고 시공지원기술자는 6점에서 3점으로 줄임. ·신기술개발활용실적은 20점과 5.5점으로 상향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신평등급은 추정가격 1,500억원 이상 BBB- 이상, 기업어음 A3-이상으로 상향 조정 ·시공관련 수상실적 삭제, 불공정행위 감점(2점), 건설재해 및 제재처분감점 (-1~3점) 신설 ·예산절감 업체는 1년간 절감액에 따라 0.2~1점 가점 부여 ·PQ 총점의 5%를 SR평가로 대체하고 전년도 매출액 대비 사회기부 등 투자액 1%마다 1점씩 최대 5점 가점 부여

최민수(연구위원·mschoi@cerik.re.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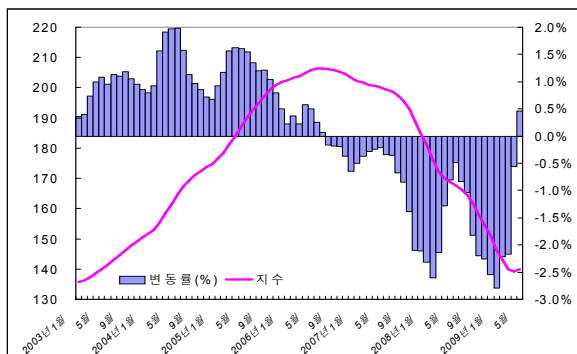
미국 주택시장 양극화 심화

- 중위주택시장 회복세, 고가주택시장 침체 지속 -

■ S&P/Case-Shiller 주택가격지수 전월 대비 34개월 만에 상승세 전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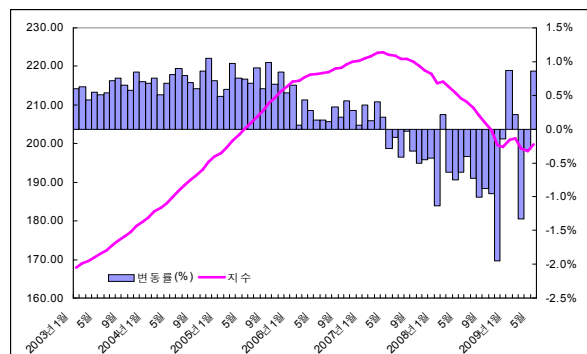
- 5월 S&P/Case-Shiller 주택가격지수가 전월 대비 0.5% 상승, 34개월만에 상승세로 반전
 - 2006년 8월부터 하락을 시작하여 33개월간 하락세가 이어졌으며 최고점 대비 32.6% 하락하여 2003년 5월 수준까지 떨어짐.
- 중위주택가격을 대표하는 연방주택금융기관(Federal Housing Finance Agency)의 미국 전역 주택가격지수는 S&P 지수보다 앞서 2009년 1월부터 상승 추이 목격
 - 3월과 4월에 다시 하락세를 보이다 5월 들어 상승세로 전환되어 상하방 리스크가 여전히 존재함을 보여줌.
 - 2007년 5월부터 하락이 시작되어 최고점 대비 -11.5%, 2005년 2월 수준까지 떨어짐.
- S&P/Case-Shiller 지수는 모든 주택을 대표하는 지수이고 연방주택금융기관의 지수는 중위주택을 대표하는 지수임.
 - S&P 주택가격지수는 점보론(주택가격 기준 729,750달러 초과 대출)과 서브프라임 대출 등을 모두 포함한 주택가격 자료를 사용하여 가격 변동성이 높은 지수임.
 - 연방주택금융기관 주택가격지수는 연방주택국과 정부 지원 기관에서 지급 보증하는 담보대출 자료만으로 산정되기 때문에 서브프라임과 점보론 자료는 제외됨.

〈S&P 주요 20개 도시 지수 및 변동률〉



자료 : S&P/Case-Shiller Home Price indices, Composite-20 지수
주 : 계절조정 후, 전월 대비 변동률

〈FHFA 미국 주택가격지수〉



자료: Federal Housing Finance Agency, US 주택가격지수
주 : 계절조정 후, 전월 대비 변동률

■ 중위주택시장과 신규주택시장은 가격 및 판매량 회복세

- 전미중개인협회(National Association of Realtors) 단독주택 중위가격도 2개월 연속 상승
 - 2009년 1월 최저점을 기록한 이후 6월 현재 최저점 대비 10.6% 상승하여 단독주택 중위가격도 회복세를 보이고 있음.
 - 기존 단독주택 판매량도 3개월 연속 증가하고 있는데 6월 판매량을 연간으로 환산하면 432만호로 예상, 이는 2008년 수준임.
 - 전미부동산협회의 가격선행지수인 PHSI(Pending Home Sales Index)도 5월까지 4개월 연속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어 당분간 상승세를 유지할 것으로 전망됨.

※ PHSI(Pending Home Sales Index)는 주택거래가 완료됐으나 대금이 지불되지 않은 상태를 지수화한 것으로 2~3개월 후의 주택가격에 대한 선행지수로 사용됨.

- 미 상무부 센서스국(U.S. Bureau of the Census)의 신규주택 판매도 3개월 연속 증가
 - 6월 들어 판매량은 연간으로는 38만 4,000호 수준으로 2008년 수준에는 미치지 못하나 전월 대비 11% 증가한 수치임.

■ 고가주택시장은 여전히 침체

- 2009년 1분기 주택 전체 판매에서 고가주택의 비중은 2.3%(2007년 4.4%, 2008년 3.7%)에 불과(전미중개인협회)
 - 모든 상업은행의 주택 담보 대출 연체율은 2009년 1/4분기 1.80%로, 2007년 이전이 0.5% 이하였던 점을 감안할 때 여전히 높은 수준임(연방준비제도이사회).
- 연방정부의 생애 첫 주택구입자에 대한 8,000달러 세제 지원책이 수요 쏠림 현상을 가중시킴.
 - 점보론주택과 연간소득이 개인 7만 5,000달러, 부부합산 15만 달러를 초과하는 가계는 생애 첫 주택 구입 자금 세제 환급 대상에서 제외
 - 50년 만에 최저 수준으로 떨어진 주택 담보 대출 금리도 점보론은 제외
 - S&P 지수가 상승세로 돌아선 것은 중위주택이 견인한 것으로 판단됨. 중위주택은 정책효과에 따라 당분간 수요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나 점보론 시장의 침체는 지속될 것으로 전망됨.

김현아(연구위원·hakim@cerik.re.kr)
허윤경(연구위원·ykhur@cerik.re.kr)

외부 지원의 한계

■ 아프리카 원조

- 지난 7월 이탈리아에서 열린 주요 8개국(G8) 정상회의에서 선진국들은 개발도상국에 대한 지원방식을 원조 중심에서 농업 발전에 대한 투자로 바꾸기로 함.
 - 이러한 정책 전환의 이면에는 세계적인 경기침체로 지원 규모를 줄이려는 의도도 있지만, 그 동안 원조방식에 대한 회의가 컸음을 시사
- 그 동안 원조와 부채 경감이 빈곤 해결책이라는 시각이 많았지만, 원조는 성장을 자극하지 못하고, 오히려 낭비와 부패를 조장하고 군사비로 전용되기도 하며, 부채 경감은 낭비적 부채를 증가시키는 등 많은 문제점이 있음이 지적되고 있음.
- 최근 잠비아 출신의 담비사 모요 박사는 선진국의 아프리카에 대한 원조가 자립의지를 훼손시켰고, 그 결과 빈곤층은 점점 늘어났다고 지적하면서 아프리카를 살리기 위해서는 원조를 줄여 5년 내에는 완전히 끊어야 한다고 주장하여 화제가 되기도 함.
 - 막대한 원조에도 불구하고 1970년대에는 아프리카 인구의 약 10%가 극빈층이었지만, 지금은 사하라 이남 인구의 70%가 하루 2달러 이하로 연명할 정도로 악화됨.
 - 식량원조보다 농사를 지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게 낫고, 부패한 지도자들에게 거액의 원조자금을 주기보다 소액의 창업자금을 빌려주는 게 효과적이라고 주장

■ 사마리아인의 딜레마(Samaritan's dilemma)

- 곤경에 처한 사람을 도와준 사마리아인에 대한 성경이야기가 아프리카 원조처럼 도덕적 해이가 발생하는 현실 세계에서는 잘못 이용될 가능성이 큼.
- 개도국에 대한 원조가 제대로 효과를 나타내지 못하는 데는 2가지 요인이 있음.
 - 예방효과(preventive effect) : 외부 지원을 기대하여 상황을 개선하고자 하는 노력을 게을리함. 자연 재해에 대한 원조의 경우, 지원을 받는 국가는 피해를 줄이기 위한 인프라 및 경보시스템 등에 대한 예방적 지출을 하지 않음.
 - 구축효과(crowding-out effect) : 상황이 어려울수록 더 많은 원조를 받을 수 있다면 수원국 정책 결정자는 상황이 악화되도록 방조해 오히려 피해를 키울 수 있음.

- 최근 세계은행이 발표한 자연재해에 대한 국제 원조 실증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사후적 재해복구 원조는 사전적 예방노력을 약화시켜 피해 규모를 키우는 상황 즉, 사마리아인의 딜레마가 실제로 발생하는 것으로 조사됨.
 - 즉, 자연재해에 대한 국제 원조 분석 결과를 보면, 원조가 커질수록 사후적인 피해 규모도 커지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아래 표에서 t 시점에서 자연재해의 피해 규모는 t-1 시점의 원조 규모($AID_{j,t-1}$)에 대해 모두 양의 회귀계수를 가짐.
 - 이는 피해 복구 원조를 기대하여 예방투자를 게을리하고, 또한 더 많은 원조를 받기 위해 피해를 키웠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암시

〈자연재해에 관한 국제원조 다중회귀분석 결과〉

	Storms	Floods	Earthquakes
$\ln(AID_{j,t-1})$	1.270** (0.623)	0.416 (0.617)	1.280 (1.822)
$\ln(GDP_{j,t-1})$	-0.190* (0.111)	0.101 (0.141)	-0.330 (0.232)
$\ln(POP_{jt})$	0.177 (0.311)	0.371** (0.157)	0.752 (0.760)
$\ln(POP DENS_{jt})$	-0.118 (0.237)	-0.010 (0.131)	-1.334* (0.779)
$OPEN_{jt}$	-0.000 (0.006)	-0.015*** (0.003)	-0.020** (0.008)
$MAGNITUDE_{jt}$	0.009*** (0.002)	-0.019 (0.023)	1.186*** (0.168)
$NATHAZ - RISK_j$	-0.100 (0.085)	0.145** (0.059)	0.345* (0.201)
$LATITUDE_j$	-0.042*** (0.015)	-0.031*** (0.012)	0.009 (0.029)
$ELEVATION_j$	-0.001* (0.000)	0.001*** (0.000)	-0.001 (0.001)

출처 : Raschky and Schwindt, "Aid, Natural Disasters and the Samaritan's Dilemma", World Bank, 2009. 6.

■ 시사점

- 이러한 문제는 국제 원조뿐만 아니라 국내 경제에서도 발생할 수 있음.
 - 홍수피해 대비를 위한 적절한 조치를 해야 하지만 정부의 수해복구 활동을 기대하여 개인이나 지자체는 사전조치에 소홀히 할 수 있음. 특히 사후 복구에 치중하는 경향이 있는 우리나라에서는 이러한 문제가 더욱 커질 수도 있음.
 - 재해예방 및 재정투자 효율을 위해서는 정부의 일방적 지원보다는 비용의 일부를 지자체 등 당사자에게 분담시키는 것이 바람직할 수 있음.
 - 과도한 중소기업 보호지원 제도는 기업이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노력에 집중하기 보다는 기업이 정신을 훼손시켜 정부에 대한 의타심을 키움으로써 장기적으로 경제 발전에 부정적인 효과를 야기할 수도 있음.

권오현(연구위원-ohkwon@cerik.re.kr)

■ 주요 정부 부처 및 기타 공공, 유관기관 회의 참여 활동

일자	기관명	주요 내용
8.10	국토해양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국토부 주택정책과 시장분석팀 자문회의에 김현아 연구위원 참여 - 7월 부동산 관련 주요 지표에 대한 점검 및 시장 상황에 대한 논의
8.13	국가건축정책기획단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국가건축정책기획단 자문회의에 김현아 연구위원 참여 - '뉴하우징 운동' 추진 현황 및 향후 과제에 대한 전문가들의 자문
8.14	금융감독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금융감독원 외부평가위원회에 두성규 연구위원 참석 - 집합투자업 및 신탁업에 관련된 외부 전문가들의 외부평가위원회 참석
	국민권익위원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공모형 PF 사업 관련 간담회에 김현아 연구위원 참석 - 공모형 PF 사업 개선과 관련하여 관련기관, 국토해양부, 지자체 발주기관, 대형 건설사 및 금융기관 관련자 등과 논의

■ 신규 연구과제 발령 현황

과제명	주요 내용
건설업 표준 윤리경영 자기진단모델 개발 연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기업 차원에서 자사의 윤리경영 수준을 측정, 판단해보고 이를 통해 부족한 부분이 무엇인지를 찾아 이를 보완할 수 있는 모델 개발 전경련 등 타 기관에서 개발된 진단모델과 차별화하여 건설업 특성에 부합 하면서 실용성 있는 윤리경영 표준 진단모델의 개발
미국과 한국의 PQ제도 비교를 통한 주요 시사점과 개선방향	<ul style="list-style-type: none"> PQ 제도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 및 미국 사례(지하철공사)에 대한 개요 및 PQ 절차 및 방식에 대한 Overview, 미국의 일상적인 방식과의 차이점 도출 미국의 PQ 항목 및 절차별 국내 제도와의 비교 및 특이점 분석을 통하여 시사점을 도출하고 국내 제도의 개선방향 도출

■ 기타 연구원 활동

- 원내 세미나 'JACOBS의 PM 방식 및 국내 S사 컨설팅 개요' 개최
 - 연구원은 8. 13(목), 원내 11층 회의실에서 현 Director of Korea Operation-Jacobs Representative in Korea이며, 미국 USC CM 석사인 최종현 이사 초청, 'JACOBS의 PM 방식 및 국내 S사 컨설팅 개요' 원내 세미나 개최
- 원내 토론회 '국가계약제도 개정 동향' 개최
 - 연구원은 8. 14(금), 원내 11층 회의실에서 김재영 국토연구원 박사를 초청하여 '국가 계약법 개정 동향 원내 토론회'를 개최

실효성 있는 민간투자 대책을...

최근 주식시장이 활기를 띠고 산업생산지수도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각종 경기지표는 국내 경기가 침체 국면에서 벗어날 조짐임을 예고한다. 정부도 올해 경제성장률을 당초 -2%에서 -1.5%로 상향 조정했다. 경계의 목소리도 크다. 민간소비가 정체됐으며 취업자가 감소하고 기업환경 악화와 부동산 경기 침체로 설비 및 건설투자의 부진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경제위기를 극복할 주요 공공건설사업은 주로 재정으로 추진했지만 조세징수의 한계와 국가재정 건전성 측면에서 재정 투자를 지속적으로 확대하기엔 어려움이 많다. 정부는 대규모 공공건설사업에 5년간 약 107조원이 소요되고 그중 약 40조원을 민간자본으로 조달할 계획이다. 주요 국책사업 추진에서 민간자본의 효과적인 조달은 사업의 성패에 매우 중요하고 정부재정의 보완과 경기활성화를 고려할 때 민간투자의 중요성은 더욱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 수년 전부터 추진된 SOC 민자 사업이 지연되고 있다. 건설업계는 금융약정이 체결되지 못해 착공에 들어가지 못했거나 착공 이후 중단된 사업규모만 약 15조원으로 추산한다. 금융경색과 경기침체로 민자사업의 수익성이 악화되고 사업위험이 증가하여 은행, 연기금 등의 재무적 투자자가 민자사업에 투자 또는 대출을 기피한다. 국내 경제여건이 호전되거나 민간투자 관련 제도의 획기적 개선이 없으면 민자사업의 활성화는 기대하기 어려울 것 같다.

민자사업의 투자환경을 개선할 다각적인 대안이 모색되어야 한다. 우선 '인프라 펀드'의 활성화를 고려할 수 있다. 대부분의 인프라펀드가 이미 많은 사업에 투자했기에 신규 사업에 투자할 여력이 크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의 적극적 지원이 필요하다. 민간사업자들은 투자환경을 개선할 다양한 정책이슈를 제기한다. 민자사업의 금융환경 개선시 발생하는 이익은 주무관청과 사업시행자가 공유하지만 반대로 변동금리로 인한 대출이자 부담가중과 같은 금융환경 악화시에는 사업시행자가 모든 부담을 떠안는다. 이는 재무적 투자자의 투자유인을 저해시키므로 최소운영수입 보장이 없는 사업은 자금 재조달에 따른 이익공유의 배제를 주장한다. 이 외에도 해지시 지급금 수준의 강화, 인센티브 방식의 부대사업 추진 등이 있다.

민간투자시장의 투자환경 개선에서 정부, 국회, 시민단체 그리고 업계 간의 시각차가 있다. 민간은 현재의 투자환경 하에서 민간투자사업의 추진이 대단히 어렵다고 토로하지만 정부나 시민단체는 민간투자사업에 부정적인 시각이 여전히 남아 있는 듯싶다. 그러나 당면한 경제위기 극복과 이후의 성장동력으로 민간투자의 역할은 매우 중요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회복국면에 있는 우리 경제가 본격적인 상승 국면으로 자리매김하도록 실효성 있는 민간투자 활성화 대책이 시급히 마련돼야 한다. <세계일보, 2009. 7. 4>

박용석(연구위원·yspark@cerik.re.kr)